

거래소 폐쇄안 규제 방향 '주목'

김동연 경제부총리, "살아있는 옵션... 다만 정부 부처 간에 아주 진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가상화폐 거래에 대해 정부의 극단적 규제 조치는 없을 것이라는 시장 기대가 높아지는 가운데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거래소 폐쇄안을 다시 언급하면서 향후 실제 규제 방향은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된다.

업계에서는 김 부총리의 발언이 새로운 건 없다면서도 이날 시행되는 가상화폐 실명전환에 따른 신규 가입자 유입에 앞서 사전적인 '시장 냉각'에 나선 것 아니냐는 반응이다.

김 부총리는 이날 **비디오킴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거래소 폐쇄안은 살아있는 옵션이긴 하다"라면서 "다만 정부 부처 간에 아주 진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1일 박상기 법무장관이 언급하고 같은날 최중규 금융위원장이 동의할 표하면서 불붙었던 '거래소 폐쇄안'은 청와대가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라며 진화에 나서면서 잠잠해졌던 바 있다.

이날 김 부총리는 법무부의 거래소 폐쇄안 발표 경위를 두고는 "법무부가 법 집행 측면을 강조하면서 강한 안을 내놓은 것이 앞서 이야기 나온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진까지 업계의 예측은 거래소 폐쇄보다는 '거래계좌 실명전환' 등 보다 완화된 형태의 규제 방향에 쏠려 있었다.

국내 거래소들 대부분은 정부 방향에 환영의 뜻을 표하며 안도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부총리 발언이 나온 직후에

는 정부가 거래소 폐쇄 같은 초 강경책을 당장에는 쓰지 않겠지만 언제든 꺼낼 수 있는 카드로 염두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이날 발언을 뜯어보면 부총리는 거래소 폐쇄를 했을 때 생기는 여러 문제들을 반론으로 지목하며 부처간 조율이 선행돼야 한다고 전제를 달았다. 이 자체는 기존 입장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

그럼에도 강경한 조치보다는 균형잡힌 규제에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던 부총리가 "살아있는 옵션"이라고 먼저 언급한 것은 과거와 미묘한 뉘앙스의 차이를 보이는 분석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부총리의 발언 자체는 정부의 기존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으로 본다"면서도

"다만 이날 시행되는 신규 거래자 진입에 앞서 시장 열리기에 나선 것이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이날 중 거래 실명제가 도입되면 신규 가입자 유입이 다시 시작된다. 이때 가상화폐 시세 등이 또 한 차례 요동칠 것으로 정부는 우려하고 있을 거란 이야기다.

또 향후 거래 실명제 도입과 과세 등을 진행하면서도 더욱 강력한 억제책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거래소 폐쇄' 카드를 과감하게 꺼내둘 수 있도록 시장에 시그널을 주는 것만 분 석도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는 늘 이 같은 '구두개입'을 통해 시장을 조정해왔다"며 "향후 정부의 이같은 태도는 지속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뉴시스

한국지엠 "정부에 조건부 투자요구 없었다"

한국지엠 모회사인 제너럴모터스(GM)가 한국 정부에 한국 신차 배정을 조건으로 1조원 규모의 투자를 요구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16일 "조건부 투자요구는 없었다"고 부인했다.

한국지엠의 한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 가진 전화 통화에서 "GM 배리 앵글 해외사업부문(GM) 사장이 한국 정부 관계자를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인사 차원이었을 뿐 조건부 투자요구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어려운 경영 타개를 위한 자구 노력과 경영 정상화 방안 등을 설명한 것으로 안다"며 "지금 지원을 요청하고,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될 주겠다는 이야기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노조를 만나서 철수나

인력감축, 구조조정 등을 검토한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라며 "다만 회생을 위해 다양한 계획과 모든 방안을 열어두고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한국지엠은 2014년 3332억원의 순손실을 시작으로 2015년 9300억원, 2016년 6315억원의 순손실을 내는 등 3년간 2조원의 누적 적자를 쌓았다. 이날 말에는 만기가 도래하는 본사 차입금 10억달러(약 1조6199억원)를 상환해야 한다.

올해 1월1일 신규 임명된 배리 앵글 GM 해외사업부문(GM) 사장은 지난 연말 방향, 백운규 산업부 장관과 KDB산업은행 관계자, 청와대 관계자 등을 만나 한국GM 회생방안과 관련한 비공개 면담을 진행한 후 13일 출국했다. /뉴시스

연말까지 액티브X 모두 제거

정부, 2020년까지 모든 공공 웹사이트 플러그인 제거

정부가 올해 중으로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30대 공공 웹사이트에서 액티브X 등의 플러그인을 없애고 2020년까지 공공기관의 모든 웹사이트에서 플러그인을 완전히 제거한다.

행안부는 2020년까지 공공기관의 웹사이트에서 플러그인을 제거하기 위한 종합적인 단계별 이행안(로드맵)을 수립할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플러그인 프로그램이란 브라우저가 제공하지 않는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 피시(PC)에 설치하고 브라우저와 연동해 사용하는 별도의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행안부는 먼저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공공기관 대표 웹사이트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와 '정부24'의 플러그인을 제거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플러그인 제거시 문제점을 규명하고 기술적·법적·재정적 제약요인과 해결방안을 찾아 이를 확산시킬 추진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

지난 15일부터 '연말정산 서비스'는 액티브X 설치 없이 이용가능한 시스템으로 개선해 가동에 들어갔다. '정부24'는 지난년부터 1450종의 민원서비스마다 플러그인 제거에 따른 문제 분석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올 한 해 동안 국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30대 공공 웹사이트의 플러그인을 모두 제거할 예정이다.

공공서비스 제공시 플러그인 설치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공인인증서의 광범위한 사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전자서명법과 관련

법령들을 개정하는 등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새로 구축되는 모든 공공 웹사이트에 플러그인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관련 규정(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도 3월까지 개정한다.

이와 함께 현행 서비스 절차를 재설계해 플러그인 설치 필요성을 완전히 없애기로 했다.

또 앞으로는 업무방식을 정보화 시대에 맞춰 고칠 부분은 없는지 점검하고, 대체가능한 새로운 업무절차로 변경기로 했다. 민간기업처럼 정부에서도 민원신청을 할 때 전자도장(공인인증서)을 사용하는 대신 본인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다른 방식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행안부는 정부 웹 서비스도 국제적 표준에 맞춰 정비한다. 현재 공공기관의 대민서비스 시스템은 8000여 대이며, 상당수가 노후돼 새로운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으로 교체해야 하는 상황이다. 새로 교체되는 시스템은 국제적 표준을 따라 에이치티엠엘5(HTML5) 방식을 채택, 다양한 브라우저에서도 접속이 가능하며 기존의 플러그인이 제공했던 여러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심보균 행안부 차관은 "대상 웹사이트들은 공공사이트 이용량의 9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사이트에서 플러그인이 모두 제거되는 올해 말에는 대동령 공약 사항인 '노플러그인'의 가시적 성과가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기업현장 방문 '발품행보' 지속

김장근 NH농협은행 전북본부장, 기업 애로사항 청취

김장근 NH농협은행 전북본부장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등 '발품행보'를 지속하고 있다.

김 본부장과 오석원 익산시지부장은 15일 익산시 왕궁면 소재 신평산업(주)를 방문, 경영 애로사항에 대해 청취했다.

이들은 이날 최근 경기동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법을 논의하고 업체 근로자들을 격려했다. 아울러 관내 기업들이 도움을 요청할 때 적시에 자금을 지원해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

기업체 방문 후 김 본부장은 익산 관내 농협은행 익산시지부, 익

산시청, 익산중앙지점, 영등동지점, 배산지점 등 5곳의 사무소장과 간담회를 열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익산 관내 기업체 및 소상공인 지원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김 본부장은 지난 1일 NH농협은행 전북본부장으로 취임한 이후 관내 영업점 및 도내 농협은행 거래 기업들을 방문하며 현장경영을 실시하고 있다.

김 본부장은 "기업 현장 방문을 지속해서 추진해 농협과 거래하면서 불편한 점은 없는지 등 여러모로 살펴보겠다"면서 "이를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농촌 주민 10명중 6명 다문화 생활 변화 '1위 음식'

농촌 지역민 10명중 6명이 다문화로 인해 생활에 변화를 느끼고 있었다. 가장 큰 변화가 있는 영역은 '음식'이었다.

농촌진흥청(농진청)이 16일 발표한 '다문화사회 농촌생활문화 변화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마을 내 다문화 영향으로 생활문화에 변화가 있다고 밝힌 농촌 주민은 전체 응답자의 57.4%(460명)였다.

가장 큰 변화가 있다는 비율은 마을 단위보다 더 높은 62.3%였다. 이는 지난해 9~10월 두 달간 전국 46개 지역 비(非)다문화가구 농촌주민 802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다. 변화를 실감하는 생활문화 영역으로

는 '음식문화'가 1순위로 꼽혔다. 응답자의 25.6%가 가족 내, 26.8%가 마을 내에 변화가 있다고 여겼다.

쌀국수를 비롯해 아열대 채소·과일 등의 식재료를 활용한 이색 음식을 접할 기회가 많아진 점을 가장 큰 변화로 꼽았다.

음식 다음으로 언어생활(가족 내 26.6%·마을 내 25.6%)이 2위였다. 다문화 영향으로 외래어를 사용하는 빈도가 늘었다는 것이다.

문화생활(가족 내 14.4%·마을 내 14.9%), 자녀양육(가족 내 12.5%·마을 내 11.7%), 가족관계(가족 내 12.2%·마을 내 10.8%), 주거환경(가족 내 11.3%·마을 내 10.6%) 등이 뒤를 이었다. /뉴시스

식약처, 지난해 수입식품 7%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7년 수입식품 규모가 수입 금액으로는 250억8772만달러, 종량으로는 1829만13759톤, 건수로는 67만2278건, 168개 국가로부터 수입됐다고 16일 밝혔다.

2016년 대비 수입 금액은 7.0%(234억3759만달러), 종량은 6.0% (1726만1000톤), 수입 건수는 7.5%(62만5443건) 증가했다고 전했다.

수입금액, 종량, 신고건수를 국가별로 분석해보면 수입 금액과 종량으로는 미국, 수입신고 건수로는 중국이 가장 많았다.

또 수입 품목을 금액, 종량 및 신고건수 별로 분석한 결과, 금액과 건수에서는 쇠고기, 종량으로는 정제·가공을 거쳐야 하는 식품원료가 가장 많이 수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뉴시스

우리동네 무인주차장 어디에 있을까?

주차하고 구경하고
무인주차장에 주차하면
시간도 절약되고 편리합니다.



[전주시 무인주차장 안내]

- 서부신시가지 도형열**
전주시 완산구 흥산북로 75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노송천 주차장**
전주시 노송여울2길 108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덕진광장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덕진광장로 3 (239-2562)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실내체육관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권삼득로 308 (251-1264)
(연중무휴) 4,000원 기본(30분):500원, 추가(15분):250원
- 서부신시가지 KB은행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1길 4-1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